

# ‘흑산공항’ 국립공원 구역 조정...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 민주당·정부, 전남도 주요 현안 책임감 갖고 챙겨야

흑산공항 건설, 한전공대 설립 등 전남도 주요 현안사업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이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민선 6기 전남지사를 지내면서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주민들 기대와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흑산공항 건설은 공항 건설 예정지 국립공원 구역 조정이라는 대안인, 한전공대 개교 지연 우려와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이라는 통로가 있다는 점에서 당정이 힘을 실

고 전남도가 역량을 모아 이들 사업을 조속히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4년째 헛바퀴 흑산공항, 국립공원구역 조정이 대안 =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4년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넘어 서지 못하고 있다. 울릉도와 달리 국립공원 구역에 포함된 흑산도는 공원 시설 내에 공항을 지으려면 국립공원위원회의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11월 첫 심의에서 막힌 사업은 2017년 9월과 2018년 10월 심의에서도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일부

## 4년째 ‘헛바퀴’ 흑산공항

을 국립공원 조정 타당성 조사 전남도·신안군 막판 총력

위원들이 환경 파괴와 항공기 안전을 문제 삼으며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주민들은 지난 2011년 함께 사업 논의가 시작된 울릉공항이 이르면 울 하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불공평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흑산도에 뒤지지 않는 보호가치를 지닌 울릉도는 주

## 2022년 개교 ‘빨간불’ 한전공대

“대학 설립인가 전 교사 확보” 현행법 상 정상 개교 어려워

민 반대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고,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흑산도는 공항 건설이 하세월이라는 것이다. 특히 울릉공항 건설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1.19로 흑산공항 4.38보다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반면, 사업비는 흑산공항(1833억원)의 3배를 웃도는 6633억원이 투입되는 데도 울릉공항 건설은 속도를 내고 있다.

4년째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자 전남도와 신안군은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재차 환경부 설득에 나섰다. 흑산공항 예정부지를 다도해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대신 대체 공원 부지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때마다 10년마다 공원 구역 등을 조정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조사가 올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전남

도와 신안군은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흑산공항이 들어서면 서울-광주-부산 등 주요 공항과 흑산도를 1시간내에 연결할 수 있다. 섬 주민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은 물론 낙도 주민들의 소득 증대, 관광객 편의 제고, 해양 주권 확보 용이 등이 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흑산도와 홍도, 가거도를 찾는 이용객은 연간 30만명이 넘지만 파도가 높은 겨울철을 중심으로 뱃길이 연 50일 이상 끊기는 실정이다.

<교사(敎師) 문제로 정상개교 불투명 한전공대, 특별법으로 풀자 = 한전공대는 최근 정상 개교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2년 3월 개교에 앞서 1년 전까지는 교사(敎師) 면적을 확보하고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공사 일정상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교사 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한전공대는 캠퍼스 설계 용역 업체를 정하고 설계를 진행 중이지만, 법정 교사 면적 2만㎡를 확보하는 시점은 빨라야 2022년 6월, 길게 잡으면 2024년 5월로 전망된다. 어떤 경우든 대학 개교보

다 늦게 된다. 한전 내부에서는 교사를 임대하는 방안도 한때 대안으로 논의됐으나, 교사 및 교지는 설립 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법규에 어긋나 대안이 되지 못했다. 한전 측은 “기한 내 교사(敎舍) 준공이 어렵다는 것은 2019년 7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결된 ‘한전공대 설립 기본 계획’에 언급된 사실로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설계 기간을 단축해 최대한 빨리 착공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사 일정상 정상 개교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현행법 체계에서 정상 개교가 어렵다면 교사 확보 특례 규정 등을 담은 이른바 한전공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문제를 풀자는 공감대가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다. 나주를 지역구로 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한전공대 정상 개교와 안정적인 대학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것”이라며 “정치권은 물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8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김영록 지사 “전남권 의대설립 공감대 형성 기회 갖자”

### 지역민·정치권·출향인사 등 결집 당부

민선 7기 전남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국민 공감대 형성, 지역민 및 지역정치권, 출향인사 등의 결집을 당부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해 전남권 의대·대학 병원 설립이 또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김 지사의 향후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의 의과대학 설립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재필실에서 가진 실국장 정책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공공의료와 의과대학의 필요성을 절감한

계기를 실감했다”며 “앞으로 논의될 협의체에서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이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과 도민, 공직자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또 “코로나19의 어려운 가운데 전남의 청정지역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도민들이 보이지 않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하고 “이번을 경험삼아 코로나19의 발생원인과 철저한 점검 및 반성을 통해 향후 개선책을 마련해 확실하게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와 태풍, 코로나19 확산 등이 발생해 도민들이 힘은 시기를 보냈다”며 “다행히도 피해가 크지 않아 실제로 거친 풍랑을 뚫고 항구로 들어온

기분이다”고 언급하고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피해를 슬기롭게 이겨낸 도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내년도 국고 확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앞으로 미래비전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정부예산안에 미래 전략산업 측면에서 의미 있는 예산이 대거 확보됐으나 아직도 전남은 갈 길이 멀다고 보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5천 억원 정도 추가 확보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논란이 된 농산물 재해 보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빠른 시일내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 도민이 협업해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 점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를 당한 농업인의 입장에서 이런 불편 사례를 발굴, 더 적극적인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내자”고 강조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

## 전남권 의대설립, 민주당은 사죄하고 약속 지켜라

### 현장과 시각

‘40:0’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수와 전남지역 의대 수다. 줄기찬 노력에도 생겨나지 않던 전남권 의과대학이 설립을 눈앞에 뒀다가 이내 멀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사단체들의 전가의 보도로 쓰인 ‘파업 카드’ 앞에 맥없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당정은 앞서 지난 7월 15일 의대 신입생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2007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신입생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한시적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였다. 당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코로나 19를 겪으며) 지역별 의료격차, 공공의료 기반 부족 등 보건 의료 체계 전반에 한계점도 나타났다.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이 부족해 감염병 대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대 정원 증원은 지난 총선 민주당 공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당정의 발표로 전남의 30년 숙원 전남권 의대 설립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다. 공공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은 ‘전남권 의과대학과 부속대학병원 설립’이기 때문이다.



김형호 <정치부 기자>

나이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는 점,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3%(전국 평균 15.9%)로 높고 낙도 등 의료 취약지가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의과대학 1개가 아니라 2개는 생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 그동안 40개의 의과대학이 운영됐으나 1개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전남권 의대 신설은 그러나 민주당이 의사 파업 협상 전면에 나서면서 좌초 위기에 처했다. 의사단체 파업을 푸는 조건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의사 정원 확대 등 공공 의료 강화 정책 추진을 코로나 19 안정화 이후, 원점 재검토하기로 지난 4일 합의했기 때문이다.

합의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당연한 일이다. 민주당 주창대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는 집권 여당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과 한 약속이자, 코로나 19를 겪은 국민 다수

가 지지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합의문 발표 전날인 지난 3일 오전에는 의사단체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2%에 달한다는 여론조사(오마이뉴스 의뢰 리얼미터 지난 1-2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조사) 결과까지 나온 상태였다.

진보당 전남도당에서는 “국민적 의제인 의사 정원 확대 문제를 왜 의사들의 이익단체 허락을 구해야 하는냐”는 취지의 날 선 비판이 나왔다. 당론에 따라야 할 민주당 전남도당마저 지역 민심을 담은 비판적 논평을 냈다.

지난 1997년부터 전남권 의대(엄밀히는 목포대 의대) 설립 운동을 주도해 온 윤소하 전 정의당 의원은 총선 낙선 후 지난 6월 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마치 앞날을 내다본 듯 이렇게 말했다. “의사협회 반발은 예상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절대적 증원 요구 여론에 부합해야 하는 게 우선 아닌가. 의대 정원 확대가 이전처럼 특정 직능단체의 반대를 핑계로 또다시 말 잔치로 끝나선 안 된다. 모든 국민이 어디에 살더라도 평등하고 안전한 삶의 조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가의 기본 책무를 핑계로 민주당과 정부는 사죄하고 약속을 하루 빨리 지켜야 한다.

녹차수도보성

# 제8회 보성세계차엑스포

온택트

2020. 9. 17.(목) ~ 20.(일) 보성군 일원

대한민국티블랜드 대회	2020. 09. 17. 10:00
류지광·추가열의 차밭힐링콘서트	2020. 09. 17. 15:00
세계차품평대회	2020. 09. 18. 10:00
보성차골든벨	2020. 09. 18. ~ 20.
보성 U 페스티벌(UCC 공모)	2020. 08. 03. ~ 31.
보성차 50% 특별기획판매전	2020. 09. 17. ~ 20.

www.bsworldteaexpo.kr

# BS 삼총사

녹차몬

꼬막몬

키위몬

## 보성 특산물 캐릭터